

주요 업무 보고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I. 일반 현황

1 특별사법경찰 운영개요

□ 운영목적

-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지명 직무범위 내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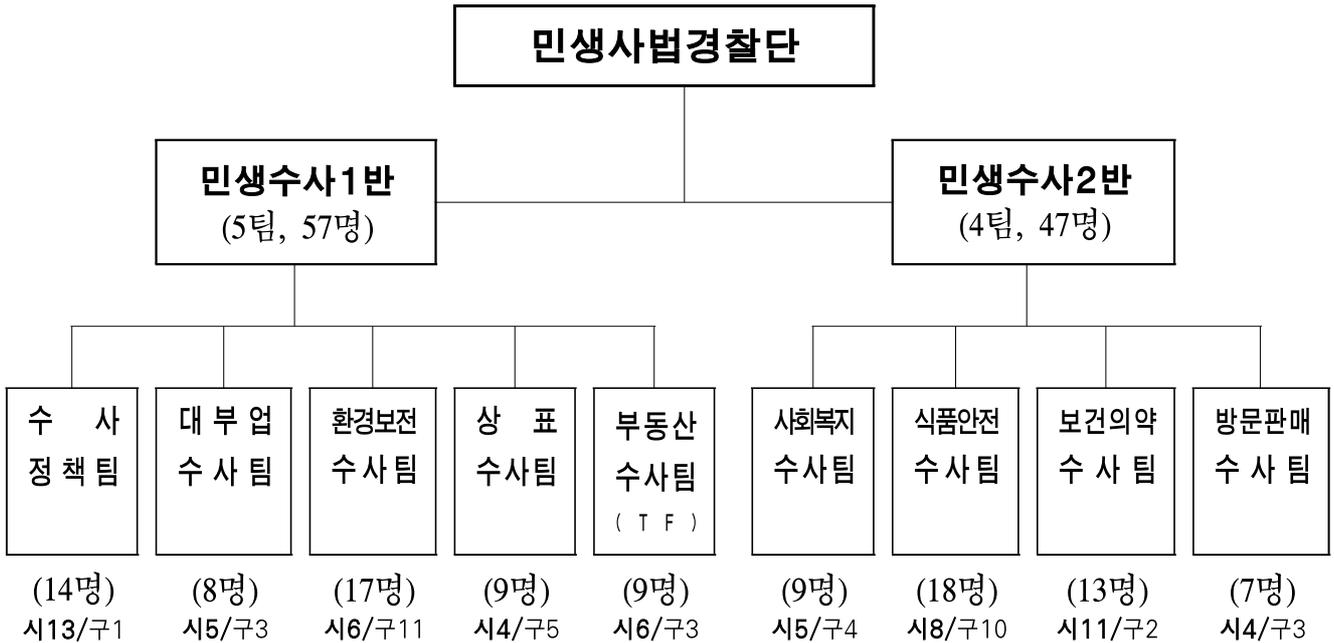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제6조)

□ 민생사법경찰단 설치연혁

- ▶ '04.05.~ : 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특사경 직무규칙 제정, '04.4.26.)
- ▶ '08.01.01. : 지자체 최초 수사전담 조직 창설(1과 2팀, 25개 지원반)
 -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82명(시10, 구72)
- ▶ '08.02.21. : 5개 분야 지명(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원산지표시)
 - ※ 추가(3개 분야) : 청소년('08.5.27.), 개발제한구역('10.11.22.), 상표('12.4.18.)
- ▶ '08.03.20. : 법률자문검사 파견(부장검사, 법무부에서 파견)
- ▶ '15.08.26. : 4개 분야 지명(대부업·다단계판매, 석유·자동차관리, 화장품, 의료기기)
- ▶ '15.11.12.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행정국 내 1단 2반 8팀)
- ▶ '16.02.04. : '민생사법경찰단' '국' 조직 승격(행정1부시장 직속, 1단 2반 8팀)
- ▶ '18.01.18. : 4개 분야 지명(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물안전, 부동산)

조직 : 1단 2반 8팀/1TF



※ 부동산수사(TF)팀('18.1.18.) / 사회복지수사팀('18.8.2.)

인력 : 104명 (시 62명, 자치구 42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직급별 인원현황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시+자치구)	104	1	2	12	52	32	5	-
시	소계	1	2	12	30	15	2	-
	수사1반	1	1	5	16	10	1	-
	수사2반	-	1	7	14	5	1	-
자치구	소계	-	-	-	22	17	3	-
	수사1반	-	-	-	11	10	2	-
	수사2반	-	-	-	11	7	1	-

※ 직렬별 : 행정(56), 보건(18), 환경(7), 기계(4), 세무(4), 약무(2), 의료(1), 화공(2), 전산(2), 지적(1), 운전(2), 토목(1), 수의(1), 간호(1), 속기(1)

□ 2018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18.10.20. 기준)

구 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증 감		예산집행 현황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594,144	1,636,783	42,639	2.7	1,182,313	72.2
사 업 예 산 (계)	1,409,269	1,501,012	91,743	6.5	1,095,382	73.0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1,940	61,940	-	-	41,731	67.4
사 무 관 리 비	37,940	37,940	-	-	29,417	77.5
국 외 업 무 여 비	15,000	15,000	-	-	4,820	32.1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9,000	-	-	7,494	83.3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18,529	1,190,361	71,832	6.4	815,050	68.5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6,381	6,658	277	4.3	4,665	70.1
사 무 관 리 비	357,701	410,023	52,322	14.6	285,845	69.7
공 공 운 영 비	51,167	72,320	21,153	41.3	50,063	69.2
국 내 여 비	378,000	378,000	-	-	240,110	63.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9,200	21,000	1,800	9.4	16,884	80.4
특 정 업 무 경 비	288,000	276,000	△12,000	△4.2	201,948	73.2
재 료 비	12,000	15,000	3,000	25.0	6,242	41.6
배 상 금 등	1,080	2,160	1,080	100.0	432	20.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5,000	9,200	4,200	84.0	8,861	96.3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8,800	248,711	19,911	8.7	238,601	95.9
사 무 관 리 비	-	1,200	1,200	100	1,200	100.0
공 공 운 영 비	-	25,011	25,011	100	23,490	93.9
전 산 개 발 비	-	222,500	222,500	100	213,911	96.1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228,800	-	△228,800	100	-	-
행 정 운 영 경 비 (계)	184,875	135,771	△49,104	△26.6	86,931	64.0
기 본 경 비	184,875	135,771	△49,104	△26.6	86,931	64.0
사 무 관 리 비	95,715	104,691	8,976	9.4	72,414	69.2
국 내 여 비	79,800	15,680	△64,120	△80.4	2,583	16.5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	5,500	5,500	100	4,201	76.4
부 서 운 영 업 무 추 진 비	9,360	9,900	540	5.8	7,733	78.1

□ 수사팀별 업무분야

반 명	팀 명	담 당 업 무
민생수사 1 반	수 사 정 책 팀	▶ 인사, 조직, 예산, 직무교육, 송치 등 특사경 업무총괄 - 단속·수사 종합계획 수립, 홍보, 제도개선, 사건송치 등
	대 부 업 수 사 팀	▶ 불법 대부업 분야 수사 - 불법 대부업 분야 기획·인지 수사 등
	환경보전 수 사 팀	▶ 환경 분야 수사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사,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등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수사
	상 표 수 사 팀	▶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 - 상표·상호 도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수사 등
	부 동 산 수 사 팀 (T F)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수사 등
민생수사 2 반	사회복지 수 사 팀	▶ 청소년보호분야, 사회복지시설 분야 수사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유해 약물 판매 및 출입·고용금지 위반 수사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
	식품안전 수 사 팀	▶ 식품·원산지표시 분야 수사 - 식품 제조·가공·유통과정 위반,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보건의학 수 사 팀	▶ 공중위생·의약·화장품·의료기기·의료·정신 분야 수사 - 위생업소 불법행위, 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판매사범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관련 개인정보 누설행위,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관련 수사 등
	방문판매 수 사 팀	▶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및 할부거래 - 불법 다단계판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기소율 [A/ (A+B)]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 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A)	건	명(B)	건	명	건	명	
합 계	770	100	920	165	190	605 (4)	730 (4)	344 (4)	395 (4)	14	19	3	3	244	313	95.4
식 품 위 생	285	37.0	301	50	52	235	249	114	119	8	9	1	1	112	120	93.2
원산지표시	33	4.3	35	1	1	32	34	25	25	-	-	1	1	6	8	93
의 약	21	2.7	27	3	3	18 (3)	24 (3)	5 (3)	7 (3)	-	-	-	-	13	17	100
공 중 위 생	23	3.0	25	5	5	18	20	12	13	-	-	-	-	6	7	100
환 경	85	11.0	131	28	37	57	94	31	45	1	2	-	-	25	47	95.7
청소년보호	1	0.1	1	1	1	-	-	-	-	-	-	-	-	-	-	-
상 표	92	11.9	93	16	16	76 (1)	77 (1)	53 (1)	54 (1)	-	-	-	-	23	23	100
개발제한구역	21	2.7	21	4	4	17	17	14	14	-	-	1	1	2	2	100
화 장 품	6	0.8	9	1	2	5	7	5	7	-	-	-	-	-	-	100
의 료 기 기	67	8.7	103	6	9	61	94	45	65	3	6	-	-	13	23	91.5
석유및자동차	69	9.0	69	12	12	57	57	30	30	-	-	-	-	27	27	100
대부및방문	29	3.8	47	20	25	9	22	4	7	-	-	-	-	5	15	100
부 동 산	36	4.7	55	18	23	18	32	6	9	2	2	-	-	10	21	81.8
사 회 복 지	2	0.3	3	-	-	2	3	-	-	-	-	-	-	2	3	-

※ () : 구속기소, 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타(타관이송, 고발취하, 기소중지, 반송 등)

세부 직무 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대 부 업 및 방 문 판 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 장 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 료 기 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 품 위 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수입식품 미신고 행위,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원 산 지 표 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 중 위 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패악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오염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하수도법 ○ 폐기물관리법 등 32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개 발 제 한 구 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표 권 침 해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권 침해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 료 정 신 건 강 시 설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거부행위, 의료기관 시설·위생 기준 위반, 개인정보 누설행위 수사 등)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강제 입원행위,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수사 등)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 회 복 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매매 행위 수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 설 물 안 전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긴급안전점검 거부 또는 기피·방해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 동 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뺏다방 단속 등)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II. 2018년 업무 추진방향

비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

목표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침해 Zero화

추진방향

- ▶ 시·구 특사경 협력 체계화·역량강화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기반조성
- ▶ 민생수사 분야 확대 및 대 시민 예방홍보 강화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기반 마련으로 수사역량 강화

- 전문관 확대, 검·경 유사분야 경력직 채용, 수사관 정원 증원
- AI활용 수사 정보체계 구축, 수사자료 전산화 추진
- 디지털포렌식센터, 검·경 수사시스템, ‘대포킬러’ 등 적극 활용

민생침해 수사범위 확대·활성화로 민생범죄 척결

- (기존)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12개 분야(55개 법률)
- (신규) ‘주택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4개 분야 16개 법률 추가

수사거버넌스 확대 및 민생범죄 신고제도 활성화

-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석유관리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강화
- 시·구 협업체계 구축, 광역 시도 특사경 협의체 구성 등 연계 강화
- 민생범죄신고 앱, 포상금 제도, 지하철광고, 시·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생사법경찰상 정립

- 인권침해 발생 사전예방, 사후구제, 인권보호시스템 제도화
- 사건관계인 신분 보호 등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 및 인권의식 함양

III. 수사역량 강화 시책 추진현황

1. 수사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2.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으로 과학수사 활성화

3. 수사 협력 거버넌스 구축

4. 민생범죄 예방 홍보

- ◆ 수사전문관 확충 및 수사관 정원 확대 등으로 조직역량 강화
- ◆ 신규전입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수사교육 강화로 수사관 마인드 제고

□ 전문관 확대 등을 통한 수사전문성 확보

- 수사 전문관 적극 육성 및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 수사 전문관 17명('18.9월 현재) → 25명까지 확대 예정(~'22)
 - 외부 전문가 5명(변호사 4, 경찰경력직 1) → 금융전문가 채용 추진('19)
- 유관기관 상호 인사교류 실시 ⇨ 수사업무 벤치마킹, 전문성 확보
 -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1명)/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1명, '18.4.복귀)
- 전문수사관과 전입 직원 멘토·멘티제 운영 : 24개조 48명('18.상·하반기)

□ 수사관별 맞춤형·체계적 교육 강화로 수사역량 제고('18)

- 외부전문가 초빙 기본직무교육 과정(1.22~1.31, 8일) : 113명 수료
 - 형법총론, 특사경의 이해, 현장수사와 적법절차 등 17개 과목 교육
- 민생사법경찰단 월별 교육과정 운영('18.1월~9월)
 - 부동산 투기단속 특별교육(1월), 청렴교육(6월), 수사절차와 인권(9월) 등
- 경찰청 인권센터 견학(2~3월),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육 이수(9회 15명)
- 인재개발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과정 신설 운영('19년 예정)

□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최초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18.5.3)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서울시예규 제721호)
 - 인권보호 원칙, 가혹행위 등의 금지, 공정한 수사, 수사사건 공보방법 규정
- 수사의 착수부터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철저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10.2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7,940	29,417	29,417	77.5%	77.5%	37,940	100%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으로 과학수사 활성화

- ◆ AI,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시스템 도입기반 마련을 통해 수사성과 제고 및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최초 '디지털포렌식센터' * 구축·운영('17.8월~)

- 전담인력 확보 : 전산직 2
- 추진실적 : 총 62회, 237개 매체분석('17.8~'18.9)

*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기기에 기록, 삭제된 정보를 수집·추출·복구 분석으로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과학수사기법

□ 국가 사용 수사시스템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 도모('17.1월~)

-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 : USB 등 온라인 전송, 20건, 119개 매체('17.7~ '18.9)
- 「수사자료표전산시스템」 : 수사자료 온라인 처리, 2,227건('17.1~'18.9)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 전용단말기로 직접 조회, 855건('17.4~'18.9)

□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18.12월)

- (현재) 각종 수사관련 자료 수기 관리 ⇨ (구축) 사건, 통계 등 전산화
 - 사건송치부 등 대장 DB화
 - 사건별 필수 서류 기록보존
 - 수사팀별·사건별 진행상황 모니터링
 - 기록 수정·삭제 등 이력관리



- 수사기록 DB화로 각종 수사 통계자료 실시한 제공 및 활용 가능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10.2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222,500	207,000	144,900	93.0%	65.1%	207,000	93.0%

□ 인터넷상 범죄정보수집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 인터넷, SNS 등 사이버상에 민생침해 관련 정보를 색출 수사정보로 활용

- ◆ 수사직무별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협치 수사시스템 구축·운영
- ◆ 자치구·타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과 민생범죄 대응 공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분야별 공조수사 체계 구축('18.1~9월)

- 한국대부금융협회·市 공정경제과와 불법대부업 수사공조 : 20건, 30명 입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공조(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 : 77건 67명 입건(진행중)
-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 석유 판매 공조수사 : 11건, 8명 입건
- 중소벤처기업부·종로구·중구와 위조상품 공조수사 : 2건, 2명 입건
- 불법 다단계 및 상조업체 공조수사 : 10개 업체, 19명 입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市 공정경제과 합동
-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성분검사 7회), 市 보건환경연구원(성분검사 13회) 등

□ 서울시·자치구·이동통신사간 협업 ⇨ 성매매 전단지 근절 추진

- 성매매업자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대포킬러) 구축 : '17.8.14
- 성매매업자 전화번호 정지 실적 : 746건('17.8.14~'18.9.30)
 - 경찰청,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 중

□ 서울시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협업시스템 운영

- 자치구 특사경 운영 활성화 협력('18.11월, 교육과정 안내, 매뉴얼 배포 등)

□ 17개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조직간 연계 협업 강화

- 전국 시도 특사경 담당 팀장 참석한 2차례 회의 개최('18.6월, 10월)
 - 특사경 상호간 수사 지원, 수사사례 벤치마킹, 특사경 처우개선 방안 등 논의
- 광역 시도 특사경 조직간 행정협의체 운영 검토
 - 17개 시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민생침해범죄 공동 대응 추진

- ◆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대시민 홍보 활성화를 통해 민생침해 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

□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설치·운영('17.2월~)

- 운영방법 :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수사관 지정 운영
 - 총 52건 접수 및 처리('17.2.~'18.9.) ※ 시 홈페이지 참조

□ 「민생범죄신고 포상금제」 도입·운영('17.4월~)

- 민생범죄 지능화, 전문화 → 시민신고제보 활성화 필요
- 포상금 지급(2회) : 35백만원('18년, '감사위원회' 예산 활용)
 - '18.4월 2,000만원 : 폐콘크리트 공공수역 무단방류자 검거 기여
 - '18.7월 1,500만원 : 불량 식품 제조·판매사범 검거 기여

□ 「민생범죄신고 앱」 구축 운영('17.5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메뉴 개설 : 총 97건 처리('17.5~'18.9)

□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운영('17.2월~) : 94개 게시물('18.9월말)

- 민사단 소개, 수사결과 보도내용 및 수사사례 전파, 유사범죄 예방 안내

□ 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민생범죄 예방 홍보 활성화

- 리플릿 배포('18.6~7), 지하철 포스터 부착('18.11~), 영상물 표출('18.12)
- 대포폰 예방 동영상 홍보(유튜브·판도라·네이버·카카오TV 활용 : '18.6월~)
- 기타 자치구 소식지, 범죄예방 기고문 등을 통한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추진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18.10.2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비)	50,000	12,381	12,381	24.8%	24.8%	50,000	100%



IV.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
2. 서민 울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
3. 주택 불법거래 집중 수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4. 위조상품 근절로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
5. 환경오염 행위 수사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6. 전방위 보건범죄 수사로 시민안전 및 건강보호
7. 부정·불량 식품 유통사범 척결로 식품 안전성 확보
8.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방지 및 청소년 보호

- ◆ 서민과 취약계층 상대로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불법추심 행위 등 근절
 - ※ 대부업 이자율 인하 : 27.9% → 24.0%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18.2.8. 시행)

□ 사업개요

- 지 명 일 : '15. 8. 26.
- 근거법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등록업체 약 2,800개 (※ 무등록 8,800여개 추정)

□ 주요 추진실적 : 총 15건, 16명 형사입건 ('18. 9월말 기준)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고금리 이자편취) 수사 : 2건, 2명
-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 수사 : 13건, 14명
 - 무등록 대부영업 및 고금리 이자편취 : 10건, 10명
 - 무등록 대부중개 : 1건, 1명, - 불법 명의대여 : 1건, 1명
 - 불법 대부광고 : 1건, 2명

□ 향후계획

- 카드깡,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
 - 무가지신문, 도로·전신주 부착 전단지 광고 집중 수거 ⇨ 불법행위 추적
 - 역세권, 먹자골목, 화상경마장 주변 등 탐문(야간, 주말, 출근시간 등)
-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 불법 대부업자 중점수사
 -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 광고업체 추적 및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 중개사이트 회원가입 후 불법행위 등 적발(모니터링 결과 적극 활용)

- ◆ 사행적인 홍보나 광고를 이용한 각종 불법 다단계 척결
- ◆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업체 위법 행위 적발로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개요

- 지명일 : '15. 8. 26.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업체현황 : 7,262개소(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7,190 / 상조업 72)

주요 추진실적 : 총 14건, 31명 형사입건 ('18. 9월말 기준)

- 회원가입에 따른 보너스 포인트 미끼 불법 다단계업체 : 2건, 4명
 - 다단계 또는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영업
- 구직자, 조기퇴직자 대상 취업미끼 불법 다단계업체 : 1건, 6명
 - 사무직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팀장승진 조건으로 고가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영업
- 방문판매법 금지행위 위반 업체 : 1건, 2명
 - 판매원들에게 여행 프로모션 및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지급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후원수당 지급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행위 : 2건, 5명
-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 : 8건, 14명

향후계획

-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상시 수사(AI 등을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 회원가입에 따른 보너스포인트 지급 등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신종 다단계 수사

- ◆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지명일 : '18. 1. 18.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4,631개 ('18.9월말 현재)

계	공인중개사(개인)	중개법인	중개인 *	비고
24,631	22,629	1,355	647	

※ 중개인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주요 추진실적 : 총 36건, 55명 형사입건 ('18.9월말 기준)

-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직 수사
 - 온·오프라인 청약통장 거래광고 확인, 통장모집 브로커 검거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어 중점 수사
 -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행위
 - 출입국기록·직장보험 가입여부 분석, 업소 현장확인 등 수사
-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수사
 -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채무 위장 미등기 전매행위

□ 향후계획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수사
 - 무자격자와 자격증 보유자의 동업(또는 고용) 형태 '기획부동산' 집중 대상
- '법무사 공증', '복등기'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수사
-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수사

- ◆ 중국 등 해외 제작 상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상표를 부착하여 재수출, 판매하는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및 ‘짜통상품’ 제조·유통 중점 수사

□ 사업개요

- 지명일 : '12. 4. 18.(상표), '16. 7. 28.(대외무역)
- 근거법령 : 상표법, 대외무역법
- 업체현황 : 32,502개소(동대문 23,624, 남대문 5,667, 명동·이태원 3,211)

□ 주요 추진실적 : 총 92건, 92명 형사입건 ('18.9월말 기준)

- 외국관광객대상 위조상품 변형판매(호객행위, 비밀매장 영업) 기획수사
 - 명동, 이태원 등 위조상품 유통업자 4명 입건, 1,500여점 압수(정품추정가 11억원)
- SNS를 통해 유명골프의류 제조·판매업자 구속
 - 밴드 등을 통해 전국 최대 골프의류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 사무실 및 보관창고 압수수색, 상표법 위반사범 1명 구속, 위조상품 8,500여점 압수(정품추정가 128억원)
- 공정무역을 위협하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수사
 - 동대문, 종로일대 원산지표시위반(라벨갈이)사범 11명 형사입건
 - 국내 봉제산업 피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야간 수시 현장 활동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종로구·중구와 협력하여 공조수사

□ 향후계획

- 외국관광객 대상 호객행위를 통한 비밀매장등에서 불법영업행위 색출 주력
- 온라인(SNS)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 수사 확대
 -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한 대형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중점 적발
 -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수사강화로 위조상품 판매행위 경각심 고취
- 시민 참여형 민관협력 수사 공조체계 구축
 - 민간협의체(의류협회, 봉제산업협회, 상표대리업체 등) 제보 등 협업 강화

- ◆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오염원 관리로 환경오염 사각지대 수사 강화
- ◆ 가짜 석유류 유통, 자동차 불법도장, 그린벨트 훼손행위 수사로 시민건강 확보

□ 사업개요

- 지명일 : '08.2.21.(환경 32개), '15.8.26.(석유,자동차), '18.1.18.(환경 7개)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18.8.2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전 분야 2개)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44개 법률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38,010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구 분	대 기	수 질	폐기물	자동차정비업소	석유판매업
38,010		3,805	6,742	22,792	3,832	839

- 개발제한구역 현황 : 149.61 km^2 (19개 자치구)

※ 6개구(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 주요 추진실적 : 총 151건, 189명 형사입건 ('18.9월말 기준)

- 금속가공 밀집지역 고농도 유해가스 및 위탁폐수 불법배출 : 12건, 12명
- 자동차 불법도장(76건), 비산먼지 발생(18건) 등 대기오염 행위 : 94건, 113명
- 먹는샘물 정보 불법유통, 개도축 폐수, 무등록 방지시설업 영업 : 8건, 21명
- 대형 경유 차량에 등유 주유판매 등 가짜 석유 불법유통 행위 : 16건, 22명
-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점유 영업행위 등 : 21건, 21명

□ 향후계획

- 허가 정비업소 방지시설 미가동 및 노상 불법도장 등 대기오염 행위 수사
- 재활용 폐기물 부적정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상 불법처리 수사

- ◆ 공중위생업소, 불법의약품, 의료기기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수사효과 증대
- ◆ 의료법, 약사법 지능적 위반사범에 대한 인지수사 강화

□ 사업개요

- 지명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업체현황 : 총 65,985개소
 - 의약업소 6,549, 공중위생업소 39,521, 화장품 3,548, 의료기기 16,367

□ 주요 추진실적 : 총 117건, 164명 형사입건 ('18.9월말 기준)

- 부정의약품(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업자(특사경 최초) : 2명 구속(9명 불구속)
 - 반영구화장업계 관례적 불법판매행위 엄단, 피의자조사 20회, 압수영장 등 집행 10회
- 수십년 전통, 무허가 특효 피부약 제조·판매사범 : 1명 구속(2명 불구속)
 - 사용금지 유독성메탄올, 동물용소독제 사용하여 33만개 10억원상당 제조판매
- 식약처 공조수사로 불법 의료기기, 불량 황사마스크 등 수사 : 67명 형사입건
- 기타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보건약법 위반사범 수사 : 62건/83명 형사입건

□ 향후계획

- 민생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불법숙박업소 기획수사
 - 공유숙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주거지역 인근에서 다수의 숙소를 임대하여 시민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전문적인 불법 숙박영업행위 (서울관광경찰대 공조수사)
- 불법 수입 의료기기 대량 유통 판매사범 수사
 - 수입허가대상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불법수입, 인터넷 대량판매 (서울세관 공조수사)
- 부정의약품, 의료법 위반사범 인지수사
 - 면허대여, 의료행위 불법알선,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행위 등

- ◆ 시민 다소비 식품 등 기본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사범 집중 수사

□ 사업개요

- 지명일 : '08. 2. 21.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
- 업체현황 : 217,362개소

(단위 : 개소)

총계	구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217,362		166,821	2,038	12,985	23,876	467	11,175

□ 주요 추진실적 : 총 318건, 336명 형사입건 ('18.9월말 기준)

- 원산지 거짓표시 등 계절 보양식 불량제조업체 수사 : 23건, 25명
- 건강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행위 등 수사 : 7건, 7명
- 인체유해 금지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행위 수사(진행중) : 6건, 6명
- 식용유지류 부정 제조·유통업소 수사(진행중) : 2건, 2명
- 무신고·무등록 등 식품·원산지분야 고발사건 수사 : 280건, 296명

□ 향후계획

-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 행위 중점 수사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
 - 인터넷 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지속적 수사
 - 해외직구 수입식품 등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활동 전개
- 유관기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 확대

-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기본재산·사업수익 처분·집행 분야 중점수사
-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매체·악물·업소) 단속·수사

□ 사업개요

- 지명일 : '18. 1. 18.(사회복지), '08. 5. 27.(청소년)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보호법
- 현황 : 사회복지 법인·시설(7,993개소, 시비보조금 1조 8천억원)
 - 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족·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4개 법정시설

□ 주요 추진실적 ('18.9월말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총 2건 3명 형사입건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 : 1건 2명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법인 운영 목적 외 사용 : 1건 1명
- 청소년보호 분야 위법행위 수사
 -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 수사(진행중) : 1건, 1명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대포킬러 운영) : 482건
 -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 단속 추진
 - 시 건강증진과 합동 서울소재 24시 편의점 권역별 집중 단속('18.5.14~5.17)
- “대포폰” 양성 차단을 위한 공익영상 제작·홍보('18.6.19~)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유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 등 집중 수사
 - 국민권익위, 복지 유관부서 등과 정보공유, 민원 등을 토대로 수사정보체계 구축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으로 전단지 살포 제로화 추진

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6	24	1		1
	시정·처리요구사항	20	19	1		
	건의사항	5	4			1
	기타(자료제출 등)	1	1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의 근무선호도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 '18년 전문관 4명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18.10월 현재) ○ 시장 표창(연간 28명), 해외연수 등을 통한 수사관 사기진작 ○ 매 분기별 수사활동 우수 수사관 선정 : 총 3명('18.10월 현재) ○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1명('18.1월) ○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 ○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관 활동복·활동화 지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 ('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계시관 홍보 추진) ○ 전문관 확대(현재 17명→'22년 25명 확대), 시장 표창, 해외 연수 기회 등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속 마련 ○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치안활동비'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p>○ 현장 근무 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어린 변호사(6급)를 외부 채용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문화를 해치고 기존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사법경찰단 신설에 따른 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범죄수사·사건 소송수행 등 수사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변호사를 채용함(행정6급, 4명) ※ 변호사 경력직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 것으로 나이·성별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수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위주의 법률전문가 대신 전·현직 경찰,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경력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바,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수사관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신용 보호장비 구비(5종/68점) 후 필요시 사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수갑, 포승줄 ○ '18.9월말, 수사관 대상 보호장비 수요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보호장비 요청은 없었음(요구시 즉시 반영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탐지기 1대, 불법도청 방지를 위한 회의용 보안장비 12대 등 구매로 수사관 신변 및 개인정보 보호 추진('19.3월 예정) ○ 신규 수사관 전입시, 체포기법 및 호신술 등 교육 예정
<p>○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니, 1년 미만 20명, 1~2년이 22명으로 전체 직원 중 2/3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무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희망근무가 많아지도록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전문관 4명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18.10월 현재) ○ 자치구 파견직원의 잦은 인력교체(연45%)에 따른 市 정원 확대 추진 : 시 정원 증원('18.1월) 56명→63명(+7) ○ 시장 표창(연간 28명), 해외연수 등을 통한 수사관 사기진작 ○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1명('18.1월) ○ 직원(남·여) 휴게실 마련 및 헬스장 정비 등 근무환경 및 여건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17) ○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사관 활동복·활동화 지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 확대(현재 17명→'22년 25명 확대), 시장 표창, 해외연수 기회 등 우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속 마련 ○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치안활동비' 신설 등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수사에 관심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희망직원 모집('18년 반기별, 시·구 업무계시관 홍보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성매매 전단지 살포를 무의미하게 만든 '대포킬러 프로그램'이 단순히 일회성 전단지 살포 중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파급효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 성과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할 것. (민생수사2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17.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자원봉사자(185명) 및 수사관이 수거한 성매매 전단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3초 간격으로 성매매 영업이 불법이라는 안내멘트를 발신하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매매업자와 성매수자간 통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효과 ○ 운영성과 : 성매매전단지 746건 전화번호 정지 조치('18.9월말) ○ '대포킬러' 프로그램 횡단전개 : 불법 대부업 전단지에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17.10.10. ~ 계속) ○ 성매매전단에 악용되는 대포폰 예방 동영상 제작·홍보 (유튜브·판도라·네이버·카카오TV 활용 : '18.6월 ~ 계속)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단지 전화번호 개설자에 대한 내사로 성매매전단지 발생 예방 지속 추진 ○ 취약지역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 우수봉사자 시상 격려
<p>○ 성과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평가주기(반기별)에 맞게 목표를 설정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디지털 수사지원 건수) 평가주기 및 목표치 조정 (변경전 : 연간, 변경후 : 반기별) ○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18.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 91.5% -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 30건(1분기 4건, 2분기 10건, 3분기 12건, 4분기 4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생사법경찰단 운영과 관련 수사관 인력만으로는 범죄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철 광고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결과 등에 대한 수사 보도자료 제공 : 총 43건('17) ○ '페이스북' 자체 개설 운영('17.2.) 등 온라인 홍보 ○ 뉴딜일자리 활용 카드 뉴스 제작 및 홍보 ○ 홈페이지 및 신고·제보센터 개설 운영('17.2.) ○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구축·운영('17.5.) ○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 시행('17.9.) ○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리플릿 제작('18.6~7) 및 배포(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구축한 민생신고 앱 등 범죄신고·제보시스템을 통한 시민신고 활성화 추진 강화 ○ '18년 홍보비 예산(50백만원) 적극 활용, 홍보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내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18.9~12) ○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홍보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국석유관리원' 등
<p>○ 민생사법경찰단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조직이므로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참여 자체 청렴교육 실시 ('17년 7회)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기강확립 관리방안 마련시행'('17.3.28) ○ '민생사법경찰단 특별 공직기강 확립대책수립'('17.8.17) 등 ※ 감사담당관 주관 공직기강확립추진실적 평가 장려기관 선정 ('17.12.13.)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실시('18.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 - 강사 :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청렴정책 추진계획 지속 추진(직원 교육 등 포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전문관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전문관 4명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18.10월 현재) ○ 市 정원 증원('18.1월) : 56명 → 63명(+7)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18.10월)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연말기준):'18(63)→'19(79)→'20(92)→'21(108)→'22(120) ○ 수사전문가 채용('16) : 변호사(4명), 검·경 출신(1명) ○ 교류중(1명) : 식약처 위해중앙수사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현재 13명→'22년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말까지 수사 전문관 20명 선정 추진 ○ 변호사 위주에서 경찰, 금융전문가 등 채용 ○ 市 인력 및 조직 유관부서(인사과, 조직과)와 협의하여 수사인력 확대 적극 추진
<p>○ 자치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열정, 집념, 진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 '18.1월(1명. 기계8) ○ 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시 자치구 직원 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시장 표창 실적 : 총 28명(시 6, 자치구 22) ○ 자치구 방문(7회) 및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한 자치구 파견직원 인사 인센티브 협조 요청(근평 및 성과급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파견직원 시장 표창, 해외연수 우선 추천 ○ 수사실적 우수 자치구 파견직원 市 전입 지속 추진 ○ 수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치안활동비' 신설 등 행정안전부에 건의 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업무보고와 관련 수사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차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범죄 예방 위한 기획수사 강화 : 목표 30건 이상('17) - '17년 기획수사 발표 34건으로 목표 초과달성 ○ 송치율 목표 : 목표 89.7%→달성 91.4%('17) ○ 디지털포렌식 수사 목표 : 목표 12건→달성 13건('17)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18. 3월) -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 91.5% -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 30건(1분기 4건, 2분기 10건, 3분기 12건, 4분기 4건)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각종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회와 함께 민생사법경찰단 운영에 따른 통합 조례 등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조속한 추진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 시스템 장비활용에 관한 매뉴얼 제작('17.3.22.) - 영상녹화 조사 절차·방법, 영상녹화물 생성 및 처리 방법 등 ○ 市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18.5.3.) - 형식 : 서울특별시예규 제721호, 구성체계(4장·68조·부칙) - 내용 : 수사의 쉰 과정(수사착수~결과공개)에 걸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 후생복지, 인권 수사 등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겠음
<p>○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검복, 수갑, 포승줄 등 각종 수사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운용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장비 사용 법적근거 마련 요청(대검찰청, '16.10.25) ○ 영상녹화 시스템 장비활용에 관한 매뉴얼 제작('17.3.22.) - 영상녹화 조사 절차·방법, 영상녹화물 생성 및 처리 방법 등 ○ 대검찰청 주최 전국 특사경 운영책임자 워크숍 참석 건의('17.9.22) - 안전한 수사활동을 위한 특사경 장구사용 근거 마련 필요 ○ 市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시행('18.5.3.) - 同 예규 제20조에서 수갑 등 보호장구 사용근거 규정 ○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면담시 법제화 건의('18.8.7)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검찰청 지속 건의·협의 등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구별 수사분야 실적 편차가 크므로 자치구의 협조 및 유기적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포 등 수사분야별로 자치구별 특수성이 있어 자치구별로 입건건수에 편차가 있음 ○ 환경, 식품 등 수사분야별 시-구 합동 단속 추진 ○ 전국 최초 통신프로그램(대포킬러) 개발 자치구 협업으로 성매매 전단지 수거체계 구축 운영 : '17.8.~ ○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위한 시·구 특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일자 : '18.1.19.(금) - 교육대상 : 총 123명(시 82명, 구 35명, 국토부 6명) - 교육내용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특사경 지명 요청 안내 및 수사기법 교육 등 ○ '18.1월(1.22~1.31, 8일간) 수사기법 교육 등을 위한 市 민생사법경찰단 기본 직무교육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직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 97명 교육이수, 자치구 11명 교육이수 각각 완료 ○ '교통'분야 자치구 특사경 수사 활성화 간담회 개최('18.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 5개구(종로,성동,중랑,서초,강남), 市 택시물류과 등 - 회의내용 : 무보험 운행차량 자치구 수사실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자치구 특사경 지원·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11~20, 5개구(성동, 금천, 중구, 서초, 노원) - 25개구청 서면조사 병행 ○ 단장-자치구 부구청장(국장)과의 간담회 개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0.10, 마포구/ '18.10.12, 중구 -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특사경 활동 협조 요청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18.10.17), '자치구 특사경 운영 활성화' 협조 요청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분야별 시-구 공조수사 강화, 공동 교육 지속 추진, 자치구 요청시 수사인력 및 각종 수사장비 지원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2월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예산 편성시 필요한 수사 장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적기적소에 집행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수사장비(압수용 냉동고)예산 상반기 집행 완료 - 예산 5,000천원→집행 4,670원('17.5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장비 예산 적시 집행으로 효율적인 수사활동 지원
<p>○ 민생사법경찰단 수당 반납과 관련 반납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생 사법경찰단의 특수성을 생각 해서 더 이상의 부당수령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수당에 관한 철저한 관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준에 따라 선 지급한 수당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 등 변동에 따른 정산으로 환수금액 발생 ○ 수당지급 관련규정 전 직원 공유 및 급여 담당 교육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실시 ○ 부당수령 방지 교육 및 지급내역 정기 모니터링
<p>○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정 여론 조사 방식을 온라인 여론 조사 보다는 정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시민 의견을 파악하도록 보완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한 여론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 '1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기관 : (사)한국정책학회('17.9.1~9.30) - 조사대상 : 총1,021명(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전문가 44명) - 조사방법 : 객관식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설문조사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응답자의 70.6% 자치경찰 도입 찬성 - 전체 응답자의 78.1%가 자치경찰제 시행시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 등 ○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자치경찰시민회의(TF)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인물이 과다 참여함으로써 구성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음. 보완하기 바람. 특히,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에도, 특정 예산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하므로 개선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되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산변경을 실시함 ○ 자치경찰시민회의는 관련연구 교수, 주민단체,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17.8.31. 출범). ○ 위원 구성시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경찰행정학과·법학과 등 교수진이 10명 포함됨 ○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
<p>○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포괄 예산에서 지원 받아 집행했음에도 의회에 미보고 하였음. 주의가 필요함.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사경 발전방안 및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4천만원)받아 집행(약 32,272천원) ○ 자치경찰 용역결과 발표 완료('18.2.6)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업무처리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 입수가 시민 제보에만 의존하고, 수사 정보 수집에 미흡한 점이 많음. 또한, 빠르게 살기 추진위원회 등 자치구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민생수사1반)

추진상황 : 추진완료

추진내용

- 수사분야별 민간협의체, 유관기관 참여 공조수사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 체결('17.4.19) 공조수사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과 가짜 석유 등 공조수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검사의뢰
-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 유도하는 '대포킬러' 운영('17.8)
 - 시, 자치구(21), 이동통신사(KT, LG U+, SK텔레콤)
- 유관기관과 공조 추진

분야	유관기관	공조내용
상표	중소벤처기업부,종로구,중구	위조상품 공조수사: 2건(2명) 입건 ('18.1~7월)
상표	BPS, IPJ 등 상표권 대리업체	위조상품 공조수사 회의('18.6.)
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사건 공조수사:77건 ('18.1~9)
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법위반 불법약품유통 공조수사 회의 ('18.9.)
보건	관세청	불법유통 의료기기 수사('18.10.)
보건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무허가 숙박업자 공조수사('18.7~)
대부	금융감독원·대부금융협회·공정경제과	불법대부광고 척결 및 피해구제 관련 업무회의 ('18.5.)
대부	대부금융협회, 공정경제과	공조수사 요청 : 20건('18.8.)
대부	대부금융협회	대부업체 현안(이자율, 광고관련 등) 공유 회의 ('18.10.)
환경	한국석유관리원	가짜 석유등 공조수사 : 8명 입건(11회, '18.1~9)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정경제과	불법 다단계 및 상조업체 공조수사 : 10개 업체, 19명 입건('18.4~5)

향후계획

- 시민단체·유관기관·관련협회 등과 협치 시스템 지속 구축·운영
 - 불법대부·다단계 등 민생침해 중요분야 합동단속·공조수사 강화
 - 서울YMCA, 한국소비자원,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협업 추진
- 인공지능(AI) 활용 인터넷상 범죄정보수집방안 연구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원활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신고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신고 시스템 간편화 및 신고체계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17. 2월~) 및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17. 5월~) 운영 -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운영 및 신고방안 홍보 카드뉴스 게재('17.2월~) ○ 민생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17.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다단계신고자 550만원 지급('17.9월) - 폐콘크리트 공공수역 무단방류 신고자 2,000만원 지급('18.4월) - 가짜 불량 ○○식품 제조 판매 신고자 1,500만원 지급('18.7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결과 언론보도 등 통해 민사단 시민 인지도 제고 ○ 홈페이지, 앱, 페이스북 등 SNS 운영 강화로 시민 신고 활성화 ○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리플릿('18.6~7 제작 및 배포 예정)에 민생범죄 신고 내용 및 방법 안내
<p>○ 최근의 범죄는 인터넷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방향도 사이버범죄 및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포출된 범죄정보 수집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불법대부, 고리대금,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상 집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SNS 등 사이버 상에 가짜 뉴스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민생침해 관련 범죄 정보를 색출하여 수사정보 활용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특사경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전문관 운영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경찰·소방·교육공무원처럼 특화할 필요가 있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경 '필수보직기간 법령개정 협조요청' 공문시행('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형사2과장) 및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 개정('18.3.20.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 :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 (개정) 2년으로 확대·통합 (※ 모든 공무원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적용 등) ○ 수사 전문직위 25개 지정 완료('17.8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전문관 4명 추가 선발하여 총 17명('18.10월 현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전문관 지속 선발 및 확대 추진(현재 17명→'22년 25명)
<p>○ 건축물 신축 준공검사 후에 불법 증축하고 임대하는 사례 등이 횡행하는데 민생사법 경찰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경 도입 필요성 등 직무범위 확대 방안 적극 검토 ※ 「건축법」을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17.11.2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p>○ 청소년성매매 전단지 불법 영업 차단과 관련 제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상 도박까지도 직무범위 확대하면 좋겠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청소년 인터넷도박이나 사이버범죄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바람. (민생수사1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임 ○ 도박죄 등은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18.6월 현재까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음 ○ 도박죄 등은 형사범으로써 일반사법경찰이 「형법」에 따라 수사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분야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범을 수사하는 것이 「사법경찰직무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치경찰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및 용역 관련 예산 자료 (민생수사1반)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제출('18. 2월)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4천만원)받아 집행(약 32,272천원)